

태양광에 줄어드는 농지... 식량안보 위기 등 우려 증가

농작물 생산량, 연평균 0.1%씩 감소
2019년 곡물자급률 21.0%에 그쳐
농업인 경제적 부담 가중 우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은 2010년 171만5000ha에서 2019년 158만1000ha로 연평균 0.9% 감소했다.

태양광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촌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농지 잠식'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 초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은 2010년 171만5000ha에서 2019년 158만1000ha로 연평균 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작물 생산량은 1544만3000t에서 1526만2000t으로 연평균 0.1%씩 줄었다.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때문에 잠식당한 농지전용 면적은 2010년 42ha에서 2018년에는 3675ha로 연평균 57.8%씩

증가했다.

이후 2019년에는 2555ha로 일시 감소했지만 이는 생산한 전력 송전에 필요한 전력설비와 변전소 등 계통연계 용량 부족과 경제성 저하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경지면적 감소 등 복합적인

이유로 곡물자급률은 2015년 23.8%에서 2019년에는 2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원은 지속되는 감소세로 정부가 수립한 2022년까지 곡물자급률 27.3%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농촌형 태양광발전 시설 증가는 식량

안보 위기 초래 외에도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경지면적 감소에 의한 식량안보 위기를 시작으로 농지 지목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실제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는 농업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농지 소유주가 보다 높은 수익성을 얻기 위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임차농들은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농지 태양광 잠식은 임차농의 생존권 문제에 이어 조사료 생산 감소에 따른 축산농가의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축산물 가격 급등 등 연쇄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사업자들은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업진흥구역 내 밀접한

우량농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설치하기 위해 염분(소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염해농지'로 둔갑시키려는 꼼수를 쓰는 바람에 사회적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식량 안보를 비롯해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사업은 에너지 자립의 관점에서 전력 수요처별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자급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농지보다는 대규모 산업시설이나 도시지역·공공기관 건물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대구경북 신공항, '거점공항' 최종 승인

중·장거리 국제선 취항 가능
연계교통망 건설 적극 추진



통합신공항 조감도

대구경북 신공항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거점공항'으로 최종 반영되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공항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항공수요 확대와 지역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더욱 구체화됐다.

정부는 먼저 사전타당성 조사 등으로 민·군 공항기능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에 처리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도록 했다. 또 분야별 국가계획 등을 통한 도로·철도 등 신공항과 연계교통망 건설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신공항이 미래의 항공교통을 대비한 충분한 규모의 공항

으로 건설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이를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결과 이번 계획에서 신공항은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거점공항' 위계를 받았고 권역별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구공항의 장거리 국제노선 취항에 걸림돌이었던 '단거리 국제노선'

문구가 3차 계획(2006~2010년) 이후 15년 만에 사라짐으로써 앞으로 중·장거리 국제선 취항도 가능해졌다.

경북도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여객과 화물 26만t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민항과 중장거리 노선을 위한 3200m 이상 활주로 건설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북도, 과수 통합마케팅 사업 '순항'

연말까지 7000억 돌파 전망

6216억원으로 4배나 늘었다.

경북도가 2014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수 통합마케팅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농협 등 산지유통조직의 개별적 마케팅을 시군 단위로 통합한 것으로 물량 규모화와 흡수출하 예방이 이뤄지면서 과수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말까지 이 사업의 판매액은 359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74억원보다 25% 이상 늘었다.

올 연말까지는 7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사업의 첫해인 2014년에는 1324억원의 매출에 불과했으나 매년 평균 30%대의 성장세를 보여 2020년에는

이같은 성장에는 통합브랜드 'daily(데일리)'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daily'는 경북 지역에서 육성하고 있는 과수 통합브랜드다.

사과, 복숭아, 자두, 포도를 대상으로 도내 16개 시군 57개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 선별해 품목별 상위 50% 이상 되는 상품만이 브랜드로 출하하고 있다.

품질관리와 마케팅은 통합마케팅 조직인 농협경북지역본부로 일원화해 효율을 높이고 있다.

'daily'의 출하 실적은 2016년 214억원에서 2020년 814억원까지 늘면서 매년 평균 40%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나해에는 중국, 베트남, 미국 등으로 544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기도 했다.

/경북-김태우 기자

광주역사민족박물관 '2021 유물 공개 구입' 실시

유물 소장 개인 참여 가능

광주역사민족박물관은 광주역사자료원의 저변 확대와 양질의 전시 콘텐츠 확보를 위해 2021 유물 공개 구입을 진행한다.

다음달 18일부터 29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를 실시하며, 문화재 매매 법인을 비롯해 관련 유물을 소장한 개인도 참여 가능하다.

구입 대상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질이 우수한 자료로 한정하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도난품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는 제외된다.

의향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광주역사 자료는 조선시대부터 근현대를 관통하는 광주를 시공간 범위로 한정한다.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 자료, 동학농민운동, 한말의병운동,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등 광주역사에 관련한 자료가

모두 해당된다. 광복 이후 4·19혁명을 비롯한 5·18광주민주화운동 자료 또한 수집 대상이다. 광주 무등산 분청사기 관련자료도 집중 구입한다.

고려 말엽부터 조선후기까지 무등산 일대에서 생산된 청자, 분청사기, 백자를 비롯한 제작 도구 등을 구입하고, 충효동 지역 관련 문헌자료, 광주의 자기소(磁器所)와 공납(貢納)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또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광주를 일군 평범한 사람들과 그들의 일상이 담긴 자료도 수집한다. 향토기업의 창업자, 노동자 관련 자료를 비롯해 문화·예술·금융·언론 등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광주의 일상을 증언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유물공개구입'을 검색하거나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

화순군, 군민에 지원금 지급

전남 화순군은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화순군의 자체 예산을 확보해 정부의 '소득하위 88%'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들에게도 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이다.

추가 지급 대상자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909명으로, 필요한 예산 9억7800만원은 예비비에서 활용한다.

화순군은 정부 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10월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주어진다.

광주전남에서는 화순군이 처음으로 '전 군민 100% 지급'을 결정했다.

화순군은 지난해에도 군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화순군 재난기초소득을 비롯해,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 등을 지원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1000원 여객선 등 '전남형 행복시책' 추진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등 호응

전남도가 민선7기 들어 도민 피부에 닿는 전남형 행복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민선7기 이후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전국 첫 시행,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우리동네 복지공동체와 청년시책 등 다양한 도민 행복시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일부터 '섬 주민 1000원 여객선'을 도내 1320개 전 구간에 본격 도입했다. 여객선이 다니는 섬 주민은 거주지에서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잇는 여객선을 1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4만9000여 섬 주민의 교통 편익이 개선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섬에 활기를 줄 '관광객 반값 여객선' 도입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매년 60만원을 전남지역 행복화폐로 지원한다.

2019년 전국 최초로 발족한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는 전남 대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등·보일러·수도 교체부터 집수리까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힘이 되고 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청년 지원시책도 펼치고 있다. 직장을 구하는 청년에게 구직수당 300만원, 창업을 희망하면 창업지원금 36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월세비 120만원, 희망디딤돌 통장 360만원을 보조한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는 결혼 축하금 200만원과 임신부에게 48만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출산 후 신생아 양육비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다동이 가정육아용품비 50만원,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월 평균 8만3000원, 초등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 등 양육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전남=김태수 기자